



## 즉시 사용

비고	# 공동배포 : 국무조정실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, 국세청, 경찰청, 금융감독원
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경제총괄과장 김진남(T.044-200-2178) 서기관 임재정(T.200-2182) 과기정통부 통산이용제도과장 전영수(T.02-2110-1930) 사무관 김지권(T.2110-1932)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강지성(T.02-2110-3544) 검사 최재순(T.2110-3271)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자원과장 조성환(T.02-2100-4280) 사무관 김정미(T.2100-4287)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주식(T.02-2100-2610) 사무관 홍상준(T.2100-2612)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전해선(T.02-2110-1560) 사무관 권만섭(T.2110-1566) 국세청 조사2과장 김진호(T.044-204-3601) 사무관 이슬(T.204-3617)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(T.02-3150-2068) 경정 박찬우(T.3150-2168)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김상록(T.02-3145-8129) 선임 김흠(T.3145-8156)

##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·집중신고기간 운영

◆ 불법고금리·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, 경찰, 지자체,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피해 집중신고 및 단속수사 시행 예정

① 신고 기간 : '18.2.1. (목) ~ 4.30. (월) (3개월간)

② 신고 대상

- 이자제한법·대부업법(최고이자 24%)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
- 폭행, 협박, 심야 방문·전화 등 불법채권추심
-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
- 대출사기, 보이스피싱,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

③ 피해자 신고방법

- 전화 : ☎ 1332번(금감원), ☎ 112번(경찰서) 및 ☎ 120번(서울시)
- 인터넷 : 금감원, 경찰청 홈페이지
- 앱 : 「모바일 금융감독원」에서 「불법금융 제보/신고(서민금융1332內)」 클릭

□ 정부는 '18.2.1(목)부터 4.30(월)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○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\*, 범죄의 지능화·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,

\* '18.28(목), 개정 이자제한법(최고이자 연 25% → 24%) 및 대부업법(27.9% → 24%) 시행 예정

- 정부는 지난 1.11.(목)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「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」을 심의·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.
-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△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(불법사금융 영업), △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(연 24%, 2.8일부터 적용) 위반, △ 폭행, 협박, 심야 방문·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, △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△대출사기, 보이스피싱,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.
-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(1332번), 경찰서(112번) 및 지방자치단체(서울: 120번, 첨부 참조)입니다. 아울러 금융감독원·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·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,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.
-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,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.
-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, 검찰·경찰·금융감독원·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.
-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, 일선 경찰서 지능·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합니다.
- 또한,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,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,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.

□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**현장 밀착형**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**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**를 미등록 대부, 대출사기, 보이스포싱까지 **확대 도입**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.

\* 제보실적,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~1,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

○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**시민감시단에 「온라인 감시단」**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합니다.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**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·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\***을 확대합니다.

\* △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(연 2회), △전화번호 변경 제한(3개월내 2회 이하), △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

○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**시·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**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(연락처 붙임 참조).

□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**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** 계획입니다.

○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**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**하고,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**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\***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

\* 채무조정·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

**※ 붙임.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**

시도	불법사금융 신고센터	
	신고센터 명칭	신고 번호
서울	민생침해 신고 '눈물그만'	다산콜센터(120), 02-2133-5387
부산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(시청 2층 행복민원실)	051-888-6655
대구	대구시 콜센터 '두드리소'	120 (휴대폰은 053-120)
인천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32-440-5663,5666
광주	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	062-613-6701~2
대전	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	042-270-3516
울산	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	052-229-2730,2733
세종	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	044-300-4044
경기	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	031-888-5550~1
강원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33-249-3476
충북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43-220-2721~2
충남	충남도청 경제정책과	041-635-3318
전북	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	1372
전남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61-287-1332
경북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54-270-5601~3
경남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(도청 본관 1층)	055-211-7987 1899-0640
제주	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	064-710-2664